

#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중장기적 변화

강 승 복\*

##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지난 30년간(1974~2004)의 임금소득불평등도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및 노동시장 규모는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1974년에 94조원에 그쳤던 국내총생산액(GDP)은 30년 후인 1994년에는 7배가 넘는 693조원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수를 보더라도 1974년의 4,444천명에서 2004년에는 14,894천명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가 2.2배 증가하였음을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이 양적성장 만큼이나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불평등도 변화 및 임금소득 상위 근로자의 전체 임금소득 점유율의 장기추이를 비롯하여 성, 학력 및 사업체 규모 등의 변수들이 임금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 II. 지니계수의 시계열 추이

여기서 분석할 통계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노동부에서 1968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는 통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kangsb@kdi.re.kr).

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이다. 2004년의 경우 총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5,819개의 사업체에서 367천명의 근로자가 조사되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74년의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평균 임금(Average wage)은 월 40천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004년의 월평균 임금 2,261천원의 1/56에 불과한 금액이다. 월평균 임금의 10년간 평균 상승률은 1974~84년이 22.1%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1984~94년은 13.5%, 1994~2004년은 이보다 낮은 8.0%

〈표 1〉 평균 및 임금과 지니계수 추이

(단위 : 천원/월, %,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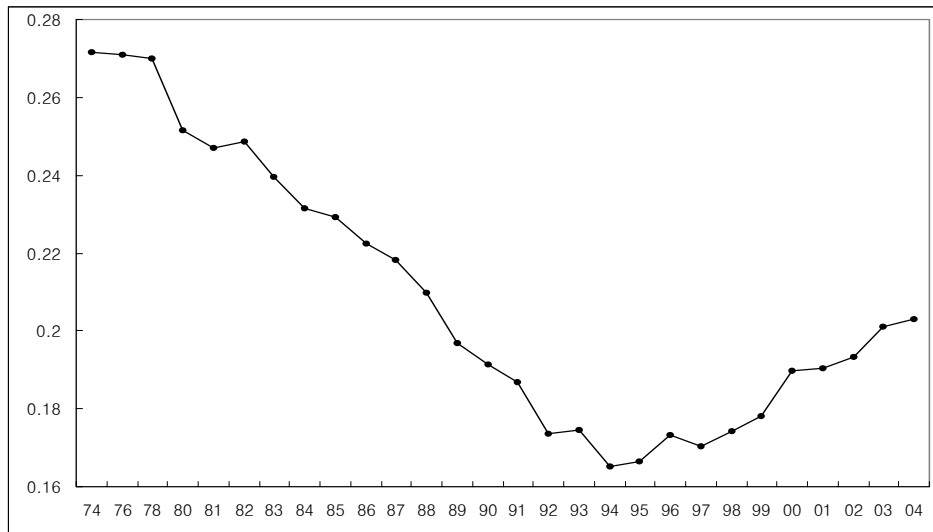
	평균임금	중위임금	지니계수
1974	40( - )	29( - )	0.3886
1984	295(22.1)	232(22.9)	0.3448
1994	1,047(13.5)	941(15.0)	0.2716
2004	2,261( 8.0)	1,900( 7.3)	0.3132

주 : ( )안은 10년간 연평균 상승률.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지니계수의 장기적 추이

(단위 : 지수)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1) 1999년 이후는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으나 본 원고에서는 시계열의 일치를 위해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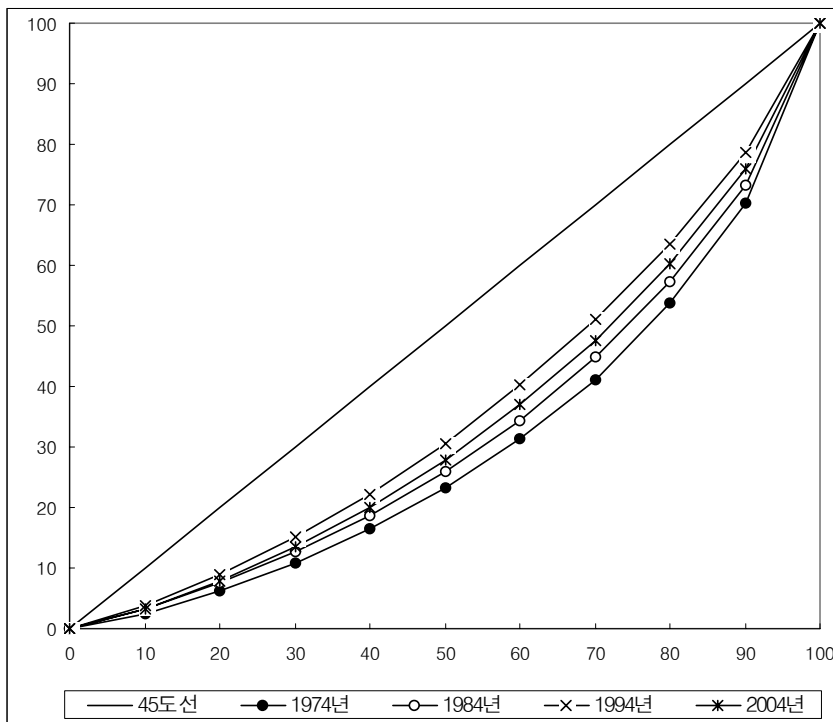
로 나타나 경제개발기로부터 완숙기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추이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표 1> 및 [그림 1]에서 나타났듯이 1974년 이후 1994년까지는 임금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수가 꾸준히 높아져 임금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임금소득불평등도 추이는 로렌츠곡선을 그려봄으로써 더욱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이란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낸 곡선으로서 완전 평등선은 원점에서 그려지는 45도선이며 이 45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임금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1974년, 1984년, 1994년 및 2004년의 임금소득불평등도를 그린 것이 [그림 2]인데, 1994년이 45도선에서 가장 가깝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2004년, 1984년, 그리고 1974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로렌츠곡선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Ⅲ 연령별 임금소득불평등도 현황

임금소득불평등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소득불평등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74년 이후 2004년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2004년 현재 60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19세 이하 연령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듯 고연령층의 지니계수가 높은 이유로는 기존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 연공서열적 임금체제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연령대에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연령별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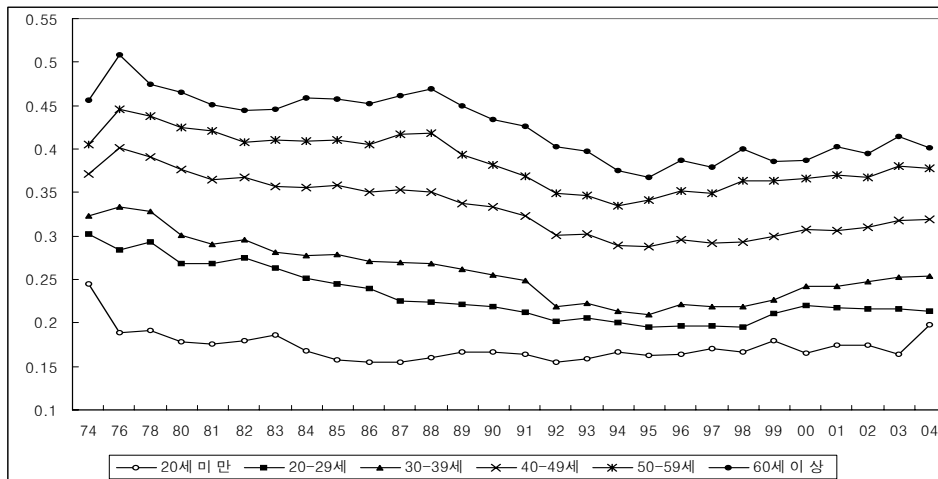
(단위 : 지수)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74	0.2444	0.3023	0.3226	0.3712	0.4052	0.4567
1984	0.1681	0.2514	0.2773	0.3554	0.4086	0.4582
1994	0.1664	0.2002	0.2131	0.2889	0.3345	0.3747
2004	0.1984	0.2139	0.2545	0.3185	0.3783	0.4018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연령별 지니계수 추이

(단위 : 지수)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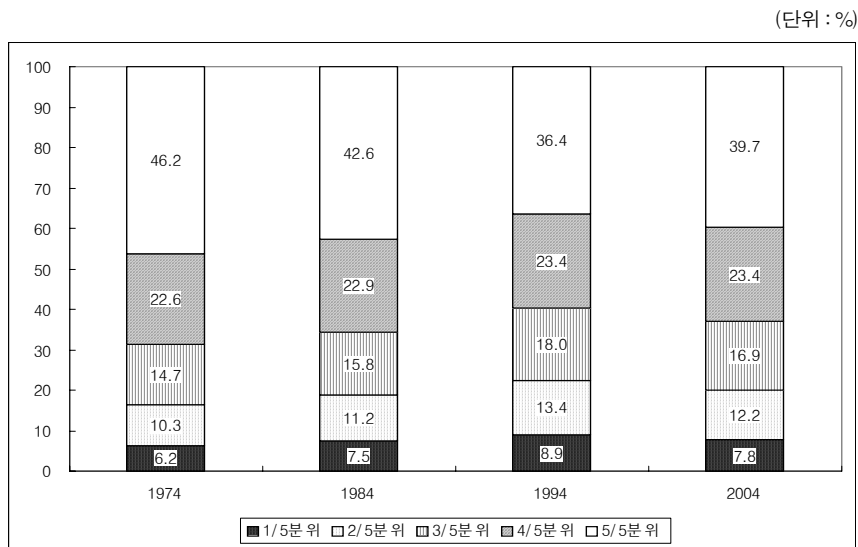
[그림 3]에서 연령별 지니계수 추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1974년부터 1994년까지 그래프의 간격이 좁혀지다가 이후에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등락을 계속하고 있어 이 연령층에서 임금 등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 IV.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전체 임금근로자들을 임금수준 순서로 배열한 후 이를 다시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을 5분위별 소득점유율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임금수준 상위 20%인 1/5분위 그룹이 전체 임금의 39.7%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5분위는 23.4%, 3/5분위는 16.9%, 4/5분위는 12.2%의 임금이 배분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위 20%인 5/5분위 그룹은 전체 임금소득의 7.8%의 미미한 임금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상위 20% 그룹의 임금소득 분배율은 1974년 및 1984년보다는 낮지만 1994년보다는 높았으며, 2004년의 하위 20% 그룹 또한 1974년 및 1984년보다는 높지만 1994년보다는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2004년은 10년 전인 1994년보다 임금소득불평등도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V. 성, 학력, 사업체 규모 프리미엄과 임금소득불평등도

다음으로 성별, 학력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소득불평등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대졸자,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임금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 그룹이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 보면 2004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70.3%<sup>2)</sup>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예상과는 달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해석하면 상용직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비율을 높아진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감안하여 볼 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 대다수가 여성임을 의미한다.

한편, 2004년 현재 전체 임금소득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근로자의 비율 70.3%보다 높은 79.0%로 나타나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 남성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74년을 보면 남성 근로자 비율은 63.9%로서 2004년보다 낮은 반면, 전체 임금소득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0.0%로서 오히려 2004년보다 높아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 남성 프리미엄은 점차 약해짐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 근로자 비율과 소득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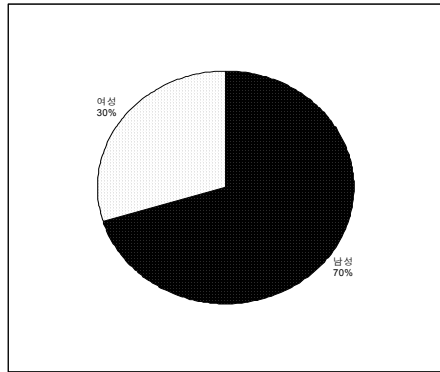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소득 중 비중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1974	63.9	36.1	80.0	20.0
1984	63.4	36.6	79.1	20.9
1994	71.3	28.7	81.4	18.6
2004	70.3	29.7	79.0	21.0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집계대상의 차이로 인해 통계값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남성비율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4년 현재는 58.1%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5] 성별 근로자 비율(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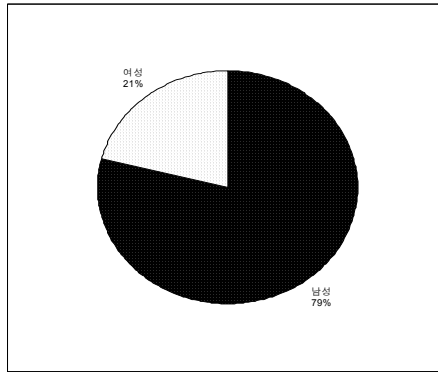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6] 성별 소득비중(2004년)

(단위 :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학력별 근로자수 및 임금비중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 중 대출자 비율이 1970년대 이후 1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74년의 경우 대출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2004년의 44.9%와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임금소득 중 대출 근로자가 가져가는 비중은 대출자수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높아졌는데, 대출자수와 마찬가지로 1974년 3.6%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4년에는 53.9%로 급증하여 대출자의 임금소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게 되었다. <표 4>를 보면 대출자의 임금소득 비중은 동 연도의 대출 근로자 비율과 비교하여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 대출 프리미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1984년에는 동 연도의 대출자 비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임금소득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대출자 공급부족현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 대출 근로자 비율과 소득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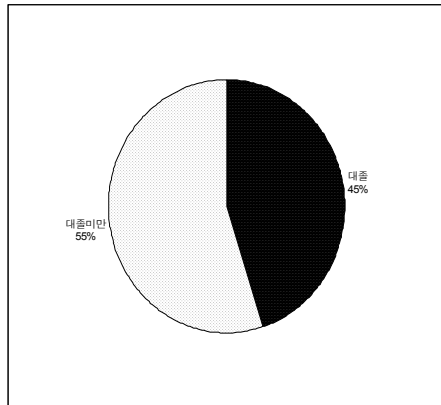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소득 중 비중	
	대출자	대출 미만자	대출자	대출 미만자
1974	2.3	97.7	3.6	96.4
1984	14.4	85.6	28.3	71.7
1994	25.8	74.2	33.9	66.1
2004	44.9	55.1	53.9	46.1

주 :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대출자의 비율은 1975년 2.4%, 1985년 6.5%, 1995년 14.1%, 2000년 17.3%로 나타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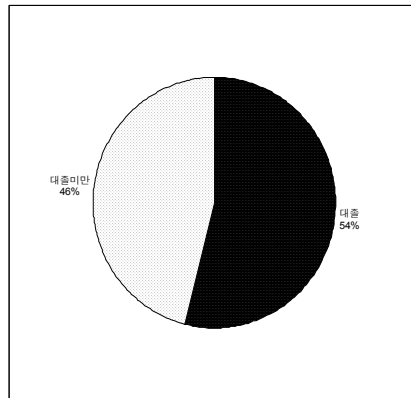
[그림 7] 대졸 근로자 비율(2004년)

(단위: %)



[그림 8] 대졸 근로자 소득비중(2004년)

(단위: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를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와 5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비율은 1974년에 32.4%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에는 17.6%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의 감소는 경제개발 초기의 대규모 사업체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이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중소기업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sup>3)</sup>

한편, 위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임금소득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은 근로자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198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근로자 비율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임금소득불평등도는 대규모 사업체의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소득을 크기대로 나열하여 10등분하여 보면 최상위 10분위 임금값은 1974년 120천원, 1984년 792천원, 1994년 2,249천원, 2004년에는 5,415천원으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후 임금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인적속성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근로자들 중 남성의 비율은 2004년 현재 92.2%의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계열로 보더라도 1974년 이후 꾸준히 95%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위 10% 근로자 중 대졸자의 비율은 2004년 현재 73.9%로

3)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1인 이상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3년 이후 500인 이상 사업체 및 근로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데, 시계열로는 1974년에 비해 1984년에 급증하였고 199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상위 10% 근로자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은 2004년 현재 35.5%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계열로는 1994년까지 10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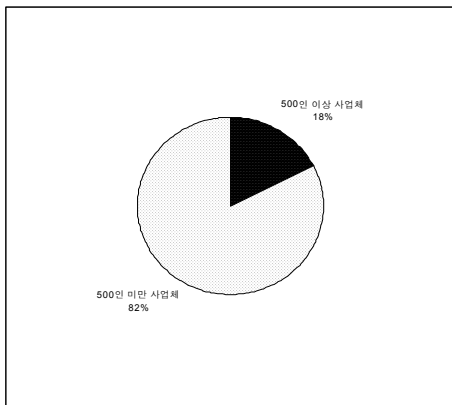
〈표 5〉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비율과 소득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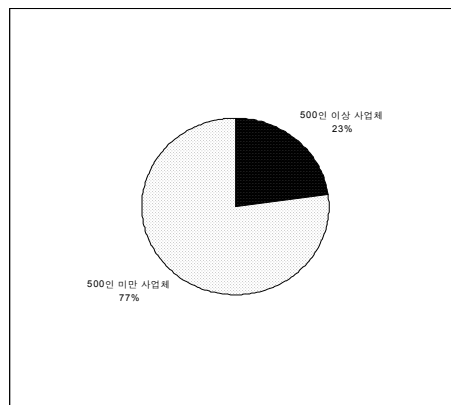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소득 중 비중	
	500인 이상 사업체	500인 미만 사업체	500인 이상 사업체	500인 미만 사업체
1974	32.4	67.6	31.5	68.5
1984	33.0	67.0	34.8	65.2
1994	22.5	77.5	27.0	73.0
2004	17.6	82.4	22.8	77.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9)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비율(2004년) (그림 10)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소득비중(2004년)  
(단위: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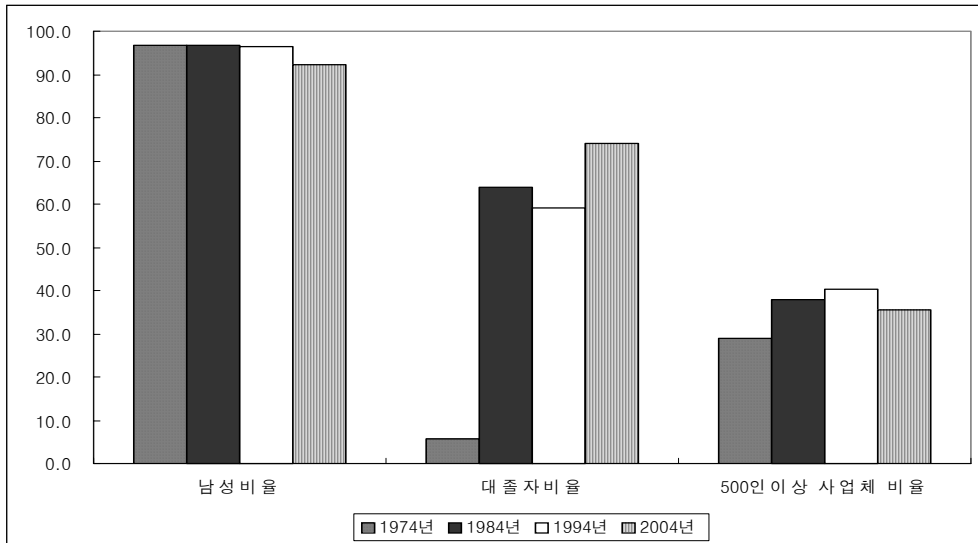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6〉 임금소득 상위 10%의 인적속성별 비율

	남 성	대 졸	500인 이상 사업체
1974	96.6	5.5	28.9
1984	96.8	63.8	38.0
1994	96.5	59.2	40.4
2004	92.2	73.9	35.5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1] 상위 10%의 근로자수 비중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IV. 맺음말

이상으로 지난 30년간(1974~2004)의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장기적인 추이를 비롯하여 연령별 임금소득불평등도,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및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 성, 학력, 사업체 규모 등 인적속성별 프리미엄의 존재 등을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2004년 현재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고령화 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고령층의 임금소득불평등도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은 근로자 비율에 거의 2배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대졸, 사업체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소득 상위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임금소득불평등도에 있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의 완화를 위해서 고령자 및 여성, 저학력층, 중·소규모 사업

체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성, 학력, 규모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